

“5·18의 진실 제대로 밝혀야”

정동영 의원, “성폭력 피해자들 ‘고립된 섬’ 처럼 시민군 참여한 젊은이들은 38년동안 모욕 겪어 광주시민의 편에서 감춰진 진실 밝힐 리더 세워야”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5.18 광주항쟁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시민들과 피해자, 유가족들의 마음에도 하루 속히 봄날이 오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며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언들이 나오면서,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못한 진실이 있

다는 것이 놀랍고 부끄러울 뿐이다. 이제는 침묵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들은 38년이 지난 오늘도 자신의 아픔을 설명해야 하는 고통과 사람들의 부

정적인 시선을 견딜 수 없어 고립된 섬처럼 살고 있다.”며 “5.18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 “독재정권의 부역자들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5.18 시민군에 참여한 젊은 여성들은 지난 38년 동안 온갖 음해와 모욕을 견디며 살아야만 했다.”며 “이제는 광주 시민의 편에서 감춰진 진실을 밝힐 새로운 리더가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정동영 의원이 5.18 시민군에 참여한 젊은

여성들을 거론하면서 광주 시민의 편에 설 새로운 리더를 세우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최근 민주당 광주주시장 공천이 확정된 5.18 시민군 총사령관 김중배 후보의 당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동영 의원은 “힘츠페터 기자와 광주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 전까지 국가권력의 무자비한 폭력과 학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며 “단 한 사람도 침묵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진상조사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생특별위원회 12' 출범 발대식에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정운천 최고위원 등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래도 민생이 먼저”... 바미당 민생특위 12 출범식

정운천 최고위원 “국민 피부와 닿는 정책 마련 최선”

바른미래당 민생특별위원회12(이하 민생특위12) 총괄 위원장인 정운천(전 주시)을 최고위원은 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앞에서 “그래도 민생이 먼저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민생특위12 출범 발대식을 벌였다.

민생특위12는 바른미래당의 출범과 함께 민생·실용 정당 이미지 제고를 위해 그동안 계속 논의가 있어 왔으며, 지역·이념을 넘어 민생 속으로 들어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이번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안한 정운천 의원이 총괄 위원장을 맡아 현역 의원 12명과 지역위원장 113명이 참여하는 등 거대 양당 사이에서 바른미래당이 민생·실용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민생특위12 총괄 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2주 동안 원내의원 및 113명의 지역위원장들과 특위 구성을 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12개 특위를 최종 확정했으며, 박주선·유

승민 공동대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특위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민생특위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을 위한 색다른 정책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회가 정상화 됐지만 민생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확정된 민생특위12는 ▲반려동물특위(정병국) ▲도시환경문제대책특위(김상화) ▲소상공인특위(이찬열) ▲청년가SOS특위(김수진) ▲폐용비리근절특위(하태경) ▲폭력근절대책특위(신용현) ▲문화예술발전특위(오신환) ▲관광산업발전특위(김관영) ▲미세먼지대책특위(유의동) ▲청정에너지특위(정운천) ▲민군상생특위(김중로) ▲재벌개혁특위(채이배)로 구성됐다.

/김진성 기자

민평당 “5·18 진상규명, 이번이 마지막 기회... 정치권 협력해야”

민주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38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9월이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생명을 불사른 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아울러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오신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금자탑이자 우리의 소중한 역사다. 그러나 5·18의 진실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가해자에 대한 완전한 처벌도 되지 않았다”며 “일부 세력들은 아직도 ‘북한군 개입설’, ‘폭도들의 난’으로 5·

18을 폄훼 왜곡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전두환 군부가 헬기와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광주 시민들을 몰살시키려 했다는 진모가 밝혀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미국의 군 기밀문서는 최초 발포 명령자와 북한군 개입설의 최초 유포자로 전두환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전두환은 속죄도 사과도 한마디 없이 자신이 피해

자라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계엄군이 자행했던 반인륜적인 만행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민간인 학살, 압매장,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을 비롯해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과 고문 사건들에 대해서도 낱말이 밝혀내야 한다”고 보았다.

최 대변인은 “5·18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도 했다.

/뉴스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점검회의에 앞서 5G 기술을 이용해 경기도 화성에서 무인자동차 시험운전 연구원과 영상 통화를 하고 있다.

“野 드루킹 특검 규모, 최순실보다 커... 말도 안돼”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야당 법안은 본인들 협상 여지 위해 만든 것” 비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야당에 제안한 드루킹 특검 규모와 기간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로 결국 현직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최순실 특검보다 더 큰 규모, 더 긴 기간으로 안을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 발의한 법안은 본인들의 협상 여지를 위해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당연히 저희들은 드루킹 특검 자체가 특검 대상이 안 된다고 본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 당당하기 때문에 야당이 국회 정상화까지 무시해가며 요구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적정(특검) 규모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 책무여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특검 규모와 내용들을 비교해도 야당 법안은 지나치게 무리하고 협상 여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본인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종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윤재옥 자유한국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번 추경은 여름에 청년들, 위기지역 노동자, 지역업자들이 적어도 곰팡이 걱정을 안 하고 전기요금 덜 걱정하고 살 수 있

게 하는 예산”이라며 “정부가 하겠다는데 국회가 막아서는 것은 옳지 않다. 협상이 어렵게 이뤄지고 있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시스

“검찰 공무원 기소율 낮아 국회, 공수처 설치해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에 비해 검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율이 현저히 낮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현황’에 따르면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 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은 2.97%다.

특히 직무범죄에 연루된 검찰·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소율은 0.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에 대한 기소율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최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는 증가 추세다.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전체 공무원의 수는 2015년 785명에서 2016년 930명, 2017년 1만3336명으로 늘었다. 검찰·법무부 공무원이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수는 2015년 1874명, 2016년 2440명, 2017년 4838명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채 의원은 “국회가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남북 고위급회담 재개 협의

靑, NSC 상임위 회의

남북행사는 예정대로 판문점 선언 이행 재확인 핵심협장 폐기 참관 6·15 공동행사준비

청와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의 남북 고위급회담 연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남북 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북측과 협의하고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외부 국가기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약 1시간 가량 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했다. NSC 상임위는 위원장을 맡는 정 실장을 비롯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상임위원들로 구성됐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임위원들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상임위원들은 또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남북 간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아울러 판문점 선언의 합의 정신에 따라 종래의 핵심협장 폐기 참관과 6·15 공동행사 준비 등 앞으로의 남북관계 일정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오는 23~25일 사이 국제기자가 단이 참관하는 가운데 종래의 핵심협장 폐기 일정을 진행한다. 다음달 15일에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행사가 남북 공동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NSC상임위 회의에서 ‘상호 존중의 정신’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역지사지를 하자는 의미다. 지금 북한과 미국이 회담을 진행하면서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방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해보려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상호존중이란 말에 담았다. 북한과 미국이 발표한 성명, 그 반응들을 보면 충분히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역지사지’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 톤 다운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인 것”이라는 질문에 “북한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미국이)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라며 “북한도 대화를 하겠다는 기본지세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고위급 회담을 재추진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6일 북한의 일방적인 고위급회담 연기 통보에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히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특직문을 북측에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남북 간 여러 채널을 통한 입장 조율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라면서 “일단 오는 22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입장과 태도를 (미국에) 충분히 전달할 것이다. 반대로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미국 입장 조율과 견해를 충분히 전달하는 식으로 입장차를 보정하고 점점을 찾아갈 것이다.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 채널에 남북 정상 핫라인 통화가 포함됐느냐’는 물음에는 “답하기 어렵다”면서 “청와대와 국무위원회를 연결하는 핫라인을 남북 정상 이외 관계자가 대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시스